



주간 통일정세

2013-2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묘향산 소년단야영소 방문(5/20,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은 19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안북도 묘향산 기슭에 있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야영소 방문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최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태성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또다시 군부대 시찰...위협발언은 없어(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05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이번 시찰에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손철주 군 총정치국 부국장,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장성 림광일, 리만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수행함.
- **北, 군 총참모장에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 임명(5/22,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총참모장이 현영철에서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22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으로 출발했다는 보도에서 공항에 나온 환송 인사 명단을 소개하면서 군 총참모장을 '김격식 동지'로 호명함.
- **北 김정은, 軍 수산물기지·식료품공장 시찰(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산하 제639군부대의 동해후방기지와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기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제639부대의 동해후방기지는 어선과 물고기 냉동 및 절임 설비, 배수리 시설을 갖춘 수산물생산기지로 군인들과 군수공업 노동자, 평양시 어린이들 등에게 물고기를 공급함.
 - 김 제1위원장은 동해후방기지의 목욕탕, 식당, 휴게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지난해에도 최고사령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부대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고 칭찬했으며 배수리 시설을 찾았고 선반가공실에서 부부 선반공을 만나 격려했다.



■ 김정은동향

- 5/20, 김정은 黨 제1비서, 5.19 리설주와 함께 '평양시 묘향산등산소년단 야영소' 시찰(5.20,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최취(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박태성(당 중앙위 부부장) 동행
- 5/21,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와 405군부대 시찰(5.21, 중통·중방·평방)
 - 장정남·손철주·전창복·림광일·리만건(平北道黨 책임비서) 동행
- 5/2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軍 제639군부대관하 '동해후방기지' 및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 가공공장'(※'11.11.13, 김정일 시찰) 현지지도(5.26, 중통·중방)
 - 손철주, 전창복, 박정천, 서흥찬 동행
- 5/26,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291군부대 시찰(5.27, 중·평방)
 - 손철주·전창복·박정천·서흥찬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 내각 총리,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5.21, 김정은 현지 지도 보도) 건설정형 현지 요해(5.23,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지하자원 탐사 성과 선전(5/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몇 년간 북한 각지에서 지질탐사가 진행돼 유망한 지하자원 개발 후보지들을 찾아냈다고 24일과 25일 차례로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연료·원료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망탐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각지 지질탐사대가 "탄광·광산 개발 후보지를 더 많이 마련하고 새 광물자원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확증했다"고 전함.
- **北 국제상품전람회 띄우기...신형차에 나노신발까지(5/26,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 제16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월 13~16일)는 폐막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북한 매체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람회에 출품된 제품에 관한 기사를 25, 26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정성무역회사가 만든 뇌기능강화제 약품 '레온교갑'을 소개했고 그 하루 전에는 비누 등의 여성용 제품이 인기가 많았다고 전함.



- **조선신보 "최룡해 방중, 대화국면 전환 전제"(5/25,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대화 국면을 열 두에 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중국에 파견된 군복 차림의 특사 평화변영에 대한 조선(북한)의 입장 전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2~24일 방중해 6자회담 등의 대화를 언급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고 "조선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평화변영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다. 군사

- **北,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발사...사흘째 '무력시위'(5/20, 연합뉴스)**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12시 KN-02(지대지)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4~5시 추가로 1발을 발사했다"면서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18일 3발, 19일 1발에 이어 이날 2발까지 모두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20일 발사체도 강원도 원산 부근의 호도반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으며 120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사회·문화

- **北,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중앙수의방역소와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 등이 지난 7일 검사를 갖고 평양의 두단 오리공장에서 오리들과 철새들의 접촉으로 H5N1형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했다고 밝힘.
 - 북한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관련 국제기구에 발병 상황을 통보하고 해당 오리공장에서 기르던 16만여 마리의 오리들을 도살처분 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탁구 세계선수권 금메달...자축분위기 '들썩'(5/20,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매체들은 20일 결승 경기와 시상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녹화중계하고 두 선수의 가족과 모교의 반응을 상세히 전하는 등 우승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50분부터 30여 분간 결승전을 녹화중계하면서 득점 표시를 위해 이례적으로 인공기와 태극기 그림을 나란히 화면에 띄움.



- **건축물 현대화나선 北, 건축대학 이름도 '리모델링'(5/26, 연합뉴스)**
 - 최근 각종 건축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이 관련 유명 대학의 이름도 현대식으로 바꿔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26일 입수된 북한의 '교육신문' 최근호(5월16일)는 북한의 건축, 건설 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건설건축재대학'이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힘.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이 대학을 "세계적인 건축과학기술 인재 양성소로 꾸려주기 위해" 명칭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함.

- **北, 국제예술경연서 잇단 성과...영재교육 효과(?) (5/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4일 북한의 유별미(11) 양이 제1차 아스타나 국제청소년 피아노콩쿠르에서 2등을 했다고 전함.
 -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이 콩쿠르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호주 등 20여 개 나라에서 온 7~18세의 청소년 140여 명이 참가함.

- **北,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추진(5/26, 연합뉴스; 경제연구)**
 - 연합뉴스가 26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159호(4월 14일 발행)는 '상업기업소(유통업체)의 경영자금 이용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개인 필명의 논문에서 전자결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 논문은 "전자결제 방법의 적용은 시대의 요구이며 그 우월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휘되고 있다"며 "모든 상업기업소들에서는 결제의 전자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日 '우경화·과거사 정당화' 비난(5/2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우경화로는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장기 방위력 운용지침인 방위계획대강 수정 움직임에 대해 "해외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도 20일 '일본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글에서 "일본은 과거에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 무조건적이며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 어선 북한 억류 확인(5/2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다렌 어선 랴오푸위(遼普漁) 25222호가 북한 측에 붙잡혀 억류된 것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랴오푸위 25222호의 선주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과 접촉, 어선과 어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함.
- **北, 싱가포르 유람선 이용 나진-금강산 관광 시작(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관광선 황성호를 이용한 제1차 나진-금강산 국제관광단이 이날 고성항 부두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북한, 억류 중이던 중국 어부들 석방(5/21, 인민일보)**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21일 오전 8시15분께 북한이 억류 중이던 어선과 선원들을 석방했다고 인민일보의 인터넷판(人民網)이 21일 밝힘.
- **중국 정부 "북한, 어민 억류사건 설명하라"(5/21,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서해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측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우리는 조선(북한)이 이번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중국에 그 결과를 설명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일본 아오모리 해안서 북한 주민 시신 발견(5/21, 교도통신)**
 - 일본 니가타현, 아키타현에 이어 아오모리현 해안에서도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됐다고 21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 경찰은 옷 주머니에 북한 지폐 30장이 들어있고, 수트에도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 이름이 적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주민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 **유엔인구기금, 北 산모 의료품 지원(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사무소는 지난달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50만 달러를 들여 북한 보건시설 300여 곳에 산모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2일 보도함.
- **美 스탠퍼드대 의료진, 평양서 결핵치료기술 전수(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스탠퍼드대 의대와 미시간주 앤드루대 의료진이 지난 15일 평양에 들어가 2주 일정으로 북한의 의료 및 보건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결핵 치료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2일 보도함.

● **北김정은, 中에 특사 급파...한반도 정세 변화 주목(5/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중국신문사)**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22일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특별비행기로 2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룡해는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는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이며, 특사단에는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과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수길 중장(우리의 소장) 등 군부 인사가 포함됨.
- 북한 특사단은 22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께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뒤 방중 첫 일정으로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전함.

● **중국 외교부 "북중, 한반도 정세 논의할 것"(5/22, 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것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이번 방문 기간 중·조(북·중) 쌍방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및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힘.

● **北, 美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에 반발(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우리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는 방법으로 압박해보려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거론하면서 "배준호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제도를 전복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에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매체 "북중관계 강화·발전문제 논의"(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22일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양국관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다오위타이(釣魚臺) 영빈관에서 왕 부장을 만났으며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양이앤이(楊燕怡) 부장조



리를 비롯한 대외연락부 관계자들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배석함.
-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지마 "북한과 사무협의를 모두 끝냈다"(5/23, 연합뉴스)**

-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일본 내각관방 참여는 자신이 지난 14~17일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과 북·일 수교 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사무적 협의를 모두 끝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이지마 내각 참여는 23일 오전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번 평양 방문과 관련, "사무적 협의는 전부 끝났으며 남은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판단"이라고 말함.

● **北, 나선특구 통한 북한 관광 상품 내달 허용(5/23, 연합뉴스)**

- 러시아와 접한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 함경북도 칠보산 등을 방문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측 사업자로부터 다음 달부터 나선을 통해 입출국하는 새로운 경로로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힘.

● **최룡해 "북한, 관련국과 대화 원해"(5/23, 중국중앙TV(CCTV))**

-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劉云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함.
- 최 총정치국장은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것이 북중 관계를 개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최룡해, 판창룡 부주석 면담...대화의사 거듭 표명(종합2보)(5/2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판창룡(范長龍)을 만나 대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외빈 접견실로 사용되는 '바이다러우'(八一大樓)를 방문, 판 부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각 당사자와 공동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복잡,



특수해 평화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 인민은 국가 건설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함.

● '김정은 특사' 최룡해, 시진핑 예방(5/24, 신화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예방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 통신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 총정치국장 일행을 접견했으며 최 총정치국장은 시 주석에게 김 제1위원장의 친필 서신을 전달함.

● 북한, 日에 경제제재해제·총련건물 계속사용 요청(5/25, 교도통신)

- 북한측은 지난 14일 평양을 방문한 이치마 이사오(飯島勳·67) 일본 내각관방 참여(參與)와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도쿄본부 건물의 계속 사용 등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북일 소식통을 인용, 25일 보도함.
- 이치마 내각참여는 17일까지 4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송일호 북일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대사 등과 회담, 북한의 일본인납치 문제 등을 논의함.

● 北, 美 ICBM 시험발사 비난... "위협의 진범"(5/26,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몰아오는 진범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문제시될 것이 없는데 북침핵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기 위한 우리 군대의 군사훈련을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는 적대세력의 나발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주장함.
- 논설은 "오늘의 조선반도(한반도)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반미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최룡해(총정치국장), 5.22 김정은 특사로 訪中(5.22, 중통·중방)
 - 리영길(인민군 상장), 김성남(당 중앙위 부부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김수길(인민군 중장) 등 동행
- 訪中 최룡해(총정치국장) 특사, 5.23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참관(5.23, 중방·평방·중통)
 - '류제이'(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동행
- 최룡해 특사, 5.24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 및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친서 전달(5.25, 중통·중·평방)
 - 리영길(軍상장), 김성남(黨부부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김수길(軍 중장), 지재룡(駐中 대사)
 - 양결지(국무위원), 왕가서(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부주석), 장업수(외교부 부부장), 정설상(당중앙위 판공청 부주임), 류결일(대외연락부 부부장), 양연이(부장조리) 등 참가
 -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軍 총정치국장), 5.23 류원산(中 정치국 상무위원)과 인민대회당에서 면담 및 연회(5.24, 중통·중·평방)
 - 최룡해, 5.24 범장룡(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중국인민해방군 8.1청사에서 면담(5.24, 중통·중·평방)
 -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軍 총정치국장), 5.24 비행기로 귀국(5.25, 중통·중·평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北 보유 핵무기' 이례적 해설 주목(5/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월12일 북한이 감행한 제3차 핵실험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밝힘.
- 이어 "작용 특성, 폭발 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 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물리적으로 과시하고 적들을 전율케 했다"고 주장함.

● 최룡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 대화 원해"(종합2보)(5/24,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북한측 입장을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이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며 대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게될지 귀추가 주목됨.
-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핵보유와 핵포기 不可'를 강조하며 "핵을 대화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는 미국의 망발은 개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미국의 '북핵 현실직시' 주장(5.23, 중통·노동신문)
- "미국이 우리(北)에게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것은 필수적 요구"라고 '병진노선' 정당성 지속 강조(5.23, 중통·노동신문)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평통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 군사훈련"(5/20,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은 지난 18~19일 이틀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밝히고 이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가증되는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처해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힘.

● 北, 6·15선언 기념행사 남북공동 개최 제안(5/23, 연합뉴스)

- 북한이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받은 팩스 원본을 공개함.

● 北 "南 정권 '5·24 조치' 고수" 비난(5/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5·24 조치 3주년을 맞은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 조치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주장함.
-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남한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어났지만 집권 세력은 '북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며 대결적 본색을 드러냈다고 밝힘.



- **조평통, 차대통령 '최고존엄 모독' 비난(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고존엄 모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정책노선을 정면으로 혈투는 것"이라며 "북남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려는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번 발언으로 박 대통령이 밝혀온 '신뢰'의 "기만적 정체가 여지 없이 드러났다"며 "이번 망발은 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이성도 체면도 다 잃어버린 정신병자의 무분별한 도발"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함.

- **北, 차대통령 첫 실명 비난...남북관계 더 꼬이나(5/25, 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남측이 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부정적 반응을 이어갔고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함.
 - 특히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을 "괴뢰 대통령 박근혜" 또는 "박근혜"라고만 지칭하고 "황당한 귀변", "요사스런 언행", "악담질" 등의 원색적인 표현도 동원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南, 개성공단 정상화 입장에서 밝혀야"(5/20, 조선중앙통신)**
 - 개성공단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조선 민심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이 아니라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라며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외 앞에 똑똑히 밝혀야 할 때"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어리석게 민심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근본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며 남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북한은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박 대통령 병진노선 발언은 "악담"(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뜻하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직접 거론하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등의 "무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악랄한 흥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함.

■ 기타 (대남)

-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사파쇼도당에 대한 광주에서의 대중적인 반파쇼민주항쟁"이라고 강조(5.20, 평방·노동신문)
- 朴 대통령 訪美 관련 '우리(北)에 대해 악담과 대결공조 약속의 대가로 5년 집권과 생존보호에 대해 담보 받은 것밖에 없다'며 '상전에 대한 굴욕외교, 구걸행각이었다'고 비난(5.21, 중통)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現 집권세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연장선 위에 생겨났다'며 "인민들의 反美反파쇼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5.22, 중통·평방·노동신문)
- [중통 논평]韓美 연합 군사훈련 및 해상훈련 실시 관련 '우리(北)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이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핵위협으로 우리(北)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지속 비난(5.22, 중통)
- [중통 논평]韓美의 '北 미사일 발사' 지적(北 도발 등)에 대해 "정상적 군사훈련"이라며 '우리(北) 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나 격동상태에 있다'고 호도(5.23, 중통)
- '現 정권에서 광주대학살 장본인들이 유신독재 부활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있다"고 주장(5.23, 중통·노동신문)
- 통일부의 '개성공단문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그 책임을 우리(北)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말장난"이라며 '對北 대결망동 중단' 지속 주장(5.23, 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최룡해 "북한, 관련국과 대화 원해">(5/23, 연합뉴스)

- 북한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입을 통해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천명했음.
-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변환점을 맞게 될 전망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 총정치국장이 방중 이틀째인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음.
- 23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최 총정치국장은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최 총정치국장은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그는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것이 북중 관계를 개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음. 북중 관계의 '개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북한 스스로 현재의 북중 관계가 냉각기에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됨.
- 최 총정치국장은 "조선 측은 중국과 함께 노력해 중조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한 거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북한이 중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 류 상무위원은 최 총정치국장에게 중국의 기존 한반도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 류 상무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이 지역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 원칙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당사국들이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런 가운데 최 총정치국장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음.
- 애초 최 총정치국장이 류 상무위원에 이어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을 만날지를 놓고는 관측이 다소 엇갈렸음.
- 김 제1위원장의 특사이자 북한 정권의 실세인 최 총정치국장이 시 주석을 예방해 친서와 함께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서 북중 간 견해차가 워낙 커 시 총서기가 예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것임.
- 그러나 북한 측이 관련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중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줬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최 총정치국장을 만나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
- 시 주석은 21~23일 지진 피해 중심지인 루산현 등 쓰촨성 각지를 시찰해 이르면 23일 늦은 오후 베이징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 일정상 최 총정치국장을 만나기 어렵지 않아 보임.

● <한·미, 北 언급에 신중...대화국면 '직행' 불투명>(5/24,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관련국과 대화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 여부가 주목됨.
- 그러나 정세완화의 핵심 대화 주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미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 한미 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남북, 북미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북한이 보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정부는 북한의 대화 언급을 신중하게 보는 분위기.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대화를 말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발언 배경이나 북한의 의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임.
- 특히, 북한이 어떤 대화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것도 정부가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임.
-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북미대화인지, 남북대화인지, 6자회담인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면서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인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음.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중에 있고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됐고 어느 정도 양국간에 논의됐는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음.
-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최룡해의 방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음.



-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지난달에도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노동신문)이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회담을 주장한 바 있음.
 - 북한의 대화 언급이 북핵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지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 특히, 미국은 그동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음.
 - 공개적으로 "비핵화 회담은 없다"고 밝힌 북한이 그동안 자신들이 내놓은 핵 보유 관련 발언과 정책을 반복하는 등의 조치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임.
 - 북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는 북핵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왔다는 심각한 불신에서 출발함.
 -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미간 2·29 합의가 무산된 이후 "워싱턴에는 대화파의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 이에 따라 북한이 정말 대화 국면 전환을 원한다면 추가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대화가 굴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음.
 - 실제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음.
 - 우리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언급한 대화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화만 말해선 안되고 진정성 있는 조치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태도·정책 변화와 함께 비핵화 사전조치가 거론됨.
 - 한미 양국이 특정 조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2·29 합의 이상을 북한이 먼저 약속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
 -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과 같은 핵심적인 비핵화 사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재개되기 어렵다는 것임.
- <6자회담 재개·대화국면 전환 여전히 불투명>(5/24,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24일 '6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반도 정세의 전환 여부가 주목됨.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가운데 최룡해가 그동안 '사멸됐다'고 북한이 주장했던 6자회담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옴.
 - 그러나 이번 언급으로 6자회담이 바로 재개되거나 북미대화 등이 갑자기 이뤄지면서 급박하게 대화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관



- 측이 대체적.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6자회담 재개의 열쇠라는 점에서임.
- 미국은 그동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음.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앞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 왔음.
 - 진정성 있는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 틀을 깨고 나가기 전 상태로의 비핵화 상태 회복임. 특히,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태도·정책 변화와 함께 비핵화 사전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됨.
 - 한미 양국이 특정 조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이상을 북한이 약속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
 -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R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과 같은 핵심적인 비핵화 사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재개되기 어렵다는 것임.
 -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는 지적. 최룡해는 이번 방중 기간에 6자회담과 대화를 언급했지만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음.
 - 우리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언급보다는 중국과 달리 북한이 비핵화를 전혀 말하지 않은 것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
 -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핵 보유를 선언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기존의 말을 180도 바꾼다고 해도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 행동으로 보이려면 북한이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왔다는 심각한 불신에서 출발. 2차 북핵위기로 시작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것도 북한의 약속 불이행 때문임.
 -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북미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인지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명확해질 전망이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 발사체 발사, 의무 위반 볼 수 없어">(5/2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며칠간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음.
 - 미국은 또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훈련을 억제하고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면밀하게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지난해 1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고조되던 북한발(發) 긴장이 최근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도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언사도 미국을 우려스럽게 한다고 부연했음.
- 리틀 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 언사가 이달 들어 약간 덜 선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이어져 온 긴장이 이전보다 작은 규모이기는 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갑작스럽게 전술과 행동을 바꿨으며 우리는 북한이 과거에 한 행태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 지도부에 이런 혼란을 억제하고 국제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관측하고 있고 북한 측에 혼란을 중단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이어 5개 북핵 6자 회담 당사국과 일치된 의견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 북한인권특사 "北지도부에 인권 책임물어야">(5/21,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지도부에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킹 특사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과 동아시아연구원이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북한정책 콘퍼런스'에서 레슬리 바셋 주한 미국 부대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노출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킹 특사는 "북한 내부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기록은 수없이 수집돼 있다"면서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재판없는 처형, 실종, 임의구금, 고문 등을 증언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보고서는 매년 변화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음.
-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 난민의 인터뷰에 기반을 둔 보고서에 따르면 10만~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에 감금돼 있으며 다수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는 이어 "최근 미약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 20~30%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으며 50%는 외국 DVD를 시청했다"고 지적했음.
- 그는 "결국 선택은 북한이 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북한이 주민 삶을 개선하려면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 킹 특사는 애초 19~23일 방한해 이 콘퍼런스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 문제를 이유로 방한을 갑자기 취소했음.
-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과의) 믿을만한 고 진정한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 이런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진지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그는 또 "북한 주민이 못 살고 의료지원도 받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가 무책임한 방식으로 행동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때 강력한 노력을 전개해서 그 상황을 낮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한미 정상은 몇주 전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신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밖에 "북한의 도발이나 무책임한 행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도 한미간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Ⅲ' 시험 발사>(5/23,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안전 문제로 하루 연기했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미니트맨Ⅲ'을 시험 발사했다고 A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미국의 미니트맨Ⅲ 발사 시험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 미니트맨Ⅲ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미국 태평양 연안 표준시로 이날 오전 6시27분께 발사됐음.
 - 미사일은 30분가량 4천마일(6천400km)을 비행하고 나서 태평양 마셜 제도의 과절런 환초 인근에 떨어졌다고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몇 차례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고 덧붙였다.
 - 미군은 애초 지난달 초 미니트맨Ⅲ를 쏠 예정이었으나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격 연기했었음.
 -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니트맨Ⅲ는 최대 사거리가 1만3천km나 돼 북한은 물론 이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음.
 - 미군은 5개 주의 지하 시설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니트맨Ⅲ를 무려 450기나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즉각 전투용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북한은 지난 1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미니트맨Ⅲ의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 <北, 美 ICBM 시험발사 비난... "위협의 진범">(5/26, 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미국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몰아오는 진범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북침핵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기 위한 우리 군대의 군사훈련을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는 적대세력의 나발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 논설은 "오늘의 조선반도(한반도)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반미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도 이날 미국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이 한편으로는 조선반도의 정세 완화를 떠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천만한 군사적 위협을 해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음.
-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사거리가 1만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ICBM '미니트맨 III'를 시험 발사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는 공동 책임">(5/20, 연합뉴스)

-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 단거리 유도탄을 발사한 것에 대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많은 이들의 바람으로 이는 관련국이 짊어진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도탄 발사에 관한 입장을 요구받고 "우리는 관련 보도와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현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상호 관계 개선에 더욱 유리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 이런 언급은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다시 격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유도탄 발사 행위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 아울러 홍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관련, "안보리의 유관 결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홍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재 일변도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음.

● <국면전환 신호탄인가...한반도 정세변화 주목>(5/2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긴장 국면을 이어온 한반도 정세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특히, 이번 북한의 특사 파견은 다음달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말로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됨.



-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기는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의 종료와 맞물려 북한의 위협 공세 수위가 낮아진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특사 파견이 대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임.
- 북한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에 모종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런 이유로 중국이 북한의 특사를 수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있음.
- 중국이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이번에 최룡해를 통해 위협적인 태도를 변화하라는 주문을 북한에 할 것으로 보임. 군사·안보를 담당하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보내진 점도 이런 점에서 관심 포인트
- 북중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고위급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음.
-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최룡해가 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음.
- 북한 특사의 방중이 시기적으로도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을 앞서 있다는 점은 정세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북한의 특사 방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임.
- 가령 북한 특사가 중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중국이 다음달 7~8일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알릴 가능성도 있음.
- 이런 식으로 북중 고위급 접촉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6월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유될 개연성이 큼.
- 북중, 미중, 한중간의 이런 연쇄 접촉을 통해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북한과 주변국간 대화 탐색기로 진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맞춰 개성공단 문제도 풀리고 우리 정부가 신뢰구축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경우 정세 변화가 속도를 더 낼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핵심인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가 대화 국면 진입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음. 대내외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정한 태도 변화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많음.
- 이럴 경우 대화 재개 전의 생각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과거 약속을 많이 뒤집어 놓은 상태"라면서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여지가 현재는 많지 않다"고 말했음.
- 이런 맥락에서 정부 안팎 일각에서는 북한의 특사 파견을 북중 관계의 복원을 통해 한·미·중 3각 대북압박 구도에 균열을 만들기 위한 차원



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만약 이번 특사 파견이 중국 어선 나포 문제 등 북중간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는 목표라면 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임.

● <"北군인들 中선장 구타" 주장...북중관계 '악재' 예상>(5/22,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사건과 관련, 해당 어선 선장이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중국어선 라오푸위 25222호의 소유주 위췌진 씨는 지난 21일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어선을 납치한 뒤 선장을 구타하고 연료를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 선장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었고 지금은 회복됐다고 위 씨는 전했다. 위 씨는 피랍선박에 동승하지는 않았음. 위 씨는 또 억류상태에 놓여 있던 지난 2주간 선원들이 배 위에서 이리저리 이동할 수는 있었지만 밤에는 한 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고 전했다.
- 지난해 5월 라오닝성 어선 라오단위 23536호가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에도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폭행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음.
-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북한에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폭행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양국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정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북한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중국 내에서는 "해안경비대가 주범일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해왔고 중국 선주가 적당한 몸값을 지급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번에는 북한군인들이 몸값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 같으며 '춘궁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음.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북중간에 심상치 않은 갈등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양측 사이를 더욱 벌려놓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중국 어선 피랍소식이 전해지자 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중국군 현역소장 튀위안(綽安)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북한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강한 분노를 쏟아냈음.



라. 일·북 관계

● <北, 日 '우경화·과거사 정당화' 비난>(5/20,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경화로는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장기 방위력 운용지침인 방위계획대강 수정 움직임에 대해 "해외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비난했음.
- 통신은 그러면서 "문제는 일본이 얼토당토않게 우리를 걸고들며 마치도 우리 때문에 방위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방군을 보유하며 적 기지를 공격해야 하는 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통신은 "과거 죄악을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날로 우경화어로 기울어지고 있는 일본이 해외 침략 전쟁의 불집을 일으킨다면 영원한 패전국, 패망국으로 되는 결과밖에 차례질(돌아갈) 것이 없다"라고 경고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일본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글에서 "일본은 과거에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 무조건적이며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 같은 주장은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일본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총리 자문역)가 최근 북한을 방문해 과거사 문제를 논의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노동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두둔하고 과거 총리 재임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발언과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을 거론하며 "일본의 철면피성과 도덕적 저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들"이라고 비판했음.
-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통해 과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는 한편 과거 범죄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일본 "북한 대화의사 표명, 사실이라면 전향적">(5/24,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의 대화 의지 표명에 대해 "사실이라면 전향적인 일"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시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회견에서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측에 관련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향적인 움직임"이라며 "주시하겠다"고 밝혔음.
- 스가 관방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대북) 기본 방침은 대화와 압력"이라



- 며 "대화의 창을 늘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음.
-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 사전 연락없이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보좌역)를 방북시켰다가 대북 공조를 해쳤다는 비판을 받은 점을 의식한 듯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전제"라며 "미국, 한국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말했음.
 -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 한 매체가 '북한이 이지마 참여에게 일본의 특정 실종자(납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 2명의 귀국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음.
 - 이지마 참여도 이에 대해 "(한국 매체의) 취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북일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려는 방해공작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다.
 - 이지마 참여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르면 이달말에 방북할 수 있다는 한국 다른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리가 없지 않느냐"고 부인했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없다">(5/21, 연합뉴스)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흑해 연안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방러한 투르보른 야글란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라브로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은 탄도 궤도를 갖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며 "엄격히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궤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음.
- 그는 "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비난을 야기한 적은 없다"며 북한을 옹호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이 지역에 대한 무력 증강 기회로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음.
- 그는 "올해 들어 몇 달 동안 벌어진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 흥분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북한만이 유엔 안보리가 취한 조치들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이 상황을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근육(무력)을 키우는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임.
-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경향이 고착되길 바라며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면서 "회담이 최 대한 빨리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북한이 18~20일에 걸쳐 동해에서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임.

바. 기 타

●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로 구호단체·유엔기구 자금난>(5/23, 연합뉴스)

-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와 유엔 기구가 대북 금융 제재의 여파로 운영비 송금이 끊기면서 자금난에 빠졌음.
- 지난 7일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핵심 외환취급 기관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끊으면서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기금 이체가 중단됐다고 22일(현지시간) 북한 내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밝혔다.
- 이 때문에 일부 단체는 수개월 버틸 돈만 남은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고 일부 활동가들은 중국 등에서 직접 현금을 반입하는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 북한 내의 국제 구호단체와 유엔 기구들은 주로 중국에서 운영자금을 송금하고 나서 조선무역은행을 거쳐 돈을 받는다. 북한 당국은 이런 송금 때 조선무역은행만 쓰도록 강제하고 있음.
-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3월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줄'로 지목된 제재 대상. 중국은행의 거래 중단은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동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중국 내 다른 은행도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꺼리고 있음.
- 북한에서 상시로 활동하는 국제 구호 단체는 6곳으로 세이브더칠드런(영국)과 세계기아원조(독일) 등 모두 유럽계. 이들은 아동 급식, 자연 재해 방지, 빈곤 퇴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도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세계기아원조의 마티아스 모계 국장은 "평양에 있는 모든 단체와 기구가 타격을 받았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한 구호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유럽연합(EU)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 유럽집행위원회와 평양 주재 EU 외교관들은 인도적 구호활동에 쓰이는 자금을 한해 대북(對北)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는 아직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프랑스 등의 일부 유럽 은행은 북한으로의 송금을 거부하고 있음. 구호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기부자 이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유엔기구들은 조선무역은행 외의 다른 북한 은행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방안을 북한 당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음. 조선무역은행은 지금까지 미국, 일본, 중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호주도 조만간 이 은행에 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측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한국, 차기 전투기용 무기 8억 달러 구매 요청">(5/24,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차기 전투기(FX)로 미국산이 선정되면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 등의 무기 8억 달러 상당을 추가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음.
 - 미국 군수 물자의 해외 판매를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런 사실을 최근 의회에 통보했다고 23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음.
 - 차기 전투기로 미국산 F-35 및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산 기종이 최종 선정되면 이들 전투기가 탑재할 미사일과 폭탄 등의 무기도 함께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달 중순 미국에 F-35 CTOL 60대 또는 F-15SE(사일런트이글) 60대 구매를 요청한 바 있음.
 -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기 도입 계획인 FX 사업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8조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종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것임.
 - 미국 DSCA가 의회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구매 요청한 F-35 전투기용 무기는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274기와 합동 정밀 직격탄(JDAM·GBU-31 등) 530발,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780발, GBU-39 벙커버스터 542발 등 총 7억9천300만 달러 상당임.
 - 미사일 지원·실험 장비와 부품, 훈련 등을 포함한 가격. 또 F-15SE가 선정되면 종류와 성능이 유사한 무기 8억2천300만 달러어치를 사들이겠다고 구매 의향을 밝혔음.
 - 이들 계약이 성사되면 주요 계약사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미국 방산 업체인 레이시언과 보잉, 록히드마틴 등이 될 것이라고 DSCA는 설명했다.
 - DSCA가 지난달 의회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자사 전투기가 한국의 FX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면 계약액이 전투기 60대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의 비용을 합쳐 108억 달러(약 12조636억 원)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F-15SE의 해당 가격은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약 1억 달러 안팎이라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전투기 가격만 60억 달러(6조7천200억 원)에 달함.
 - 제작사인 보잉 측은 정부 간 계약 대상인 장비 및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의 부대비용을 24억800만 달러(2조6천897억 원)로 추정해 총 계약액은 80억~90억 달러가 될 전망
 - 이번 무기 판매가 성사되면 계약은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



로 이뤄짐. DSCA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한국의 국방력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음.

-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법에 따른 것이고 판매나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전략대화>(5/23,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제6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연다고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23일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 관계 및 공통으로 관심을 둔 국제·지역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지는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2008년 시작됐음.
- 고정된 의제 없이 양국이 서로 관심을 둔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돼왔음.
-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6차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한 확고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특사 파견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5/20, 연합뉴스)

-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부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태도 변화를 촉구했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더) 반복할 필요가 없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을 한 측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음.
- 조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한 다음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반성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빗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을 합사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시설"이라면서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



- 같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을 중단하고 주민 생활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관련, "중국은 북한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야, 日 '릴레이 망언' 규탄... "폭거이자 선전포고">(5/22, 연합뉴스)
- 여야는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유신회 공동대표 등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역사 왜곡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심각한 역사 왜곡과 망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이행 등을 촉구했다.
 - 이들은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을 이행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국회의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다짐했다.
 - 김을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정치인들을 '국민소환'으로 엄벌해 일본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이들 의원은 "일본은 독일을 보고 배우기 바란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나치 전범의 만행을 무릎 꿇고 깨끗이 사과한 후 독일에 대한 인류의 신뢰 회복이 시작됐다"고 지적
 - 유기홍, 배재정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일본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망동·망언 정치인 처벌 등을 촉구했다.
 - 이들은 "작금의 사태는 우경화 돼가는 일본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잘못된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기본이념과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이며,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받은 아시아 국가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 <일본 아베노믹스 불안감 확산, 한국도 후폭풍 우려>(5/24, 연합뉴스)
- 일본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음.
 - 23일 일본 닷케이 225 지수가 전날보다 7.32% 내려앉자 그간 연초 대



- 비 50% 이상, 전년 대비 70% 가까이 급등하는 등 과열한 탓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시각이 우세
- 그러나 닛케이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으나 거래량이 급증해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이므로 세계 투자자들도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이번 일본 증시 폭락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실망스러운 중국의 5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꼽혔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면의 배경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는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추구가 작용했고, 좀 더 근원적으로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대규모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장기 금리의 상승에 따라 채권시장이 동요하면서 본격화하고 있음.
 - 23일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오전 한때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1%까지 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금리 상승을 경계하면서도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억제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음.
 -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은 일본 경제뿐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말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국채 금리가 200bp(2%) 급등하면 세계 각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50~150bp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이 각본대로라면 향후 2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이 2.5%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실질 GDP 역시 0.5%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IMF는 지적
 - 이러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한국의 시장 전문가들은 적신호와 청신호 양쪽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음.
 -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우려가 커지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다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더해지면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으므로 한국 경제에도 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옴.
 - 반면, 엔저라는 강력한 부산물을 낳은 아베노믹스가 수정되면 엔저 속도가 조절돼 한국 수출에 숨통이 트이며 그간 소외됐던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라. 미·중 관계

- <내달 미·중 정상회담서 G2 질서·한반도정세 조율>(5/21, 연합뉴스)
 - 내달 7~8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은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강대국이 향후 국제



- 질서의 흐름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 양국의 최근 관계는 '대결과 협력'이라는 양면적 틀로 설명돼왔음. 지난 해 대선에서 승리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외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유럽이나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향후 10년간 4천500억 달러의 군사비를 감축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선택이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어려운 국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하고 있음.
 -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인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심지어 호주까지 포괄하는 '중국 포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게다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상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지은 데 이어 일본까지 포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를 출범시킬 태세
 - 이 모든 것이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임. 여기에 인권과 사이버 테러라는 미묘한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거론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지난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하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한 시 주석의 행보도 만만치 않음. 오는 2022년까지 중국을 이끌 지도자로 부상한 시 주석은 집권기간에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음.
 -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경제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미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시 주석은 중국의 힘에 걸맞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제는 대국으로서 우뚝 선다는 뜻의 '대국굴기(大國崛起)' 전략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이번 오바마와 시진핑의 대좌는 'G2(주요2개국)'의 반열에 올라서려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어떤 관계의 틀을 설정할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를 이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주요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과 잭 루 재무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고위당국자들을 잇따라 중국에 보내 자신의 우호적 메시지를 전달할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썼음.
 - 이 상황에서 특히 북한 문제가 협력의 상징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공개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음.
 - 중국 또한 대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



면서 북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주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더이상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수단이 강구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모색될 것으로 보임.

● <美 의원들 "북핵 사라져도 靑 MD 유지" 법안 추진>(5/22,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핵 위험이 사라져도 동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AP통신은 22일 공화당 주도의 한 하원 패널(House panel)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국방정책관련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삽입됐다고 보도. 이 법안은 미국의 핵 및 미사일 방어 자산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핵이 제거되면 이 지역의 MD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음.
- 당시 케리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MD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 외신들은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 MD 시스템을 축소할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케리 장관은 나중에 아시아 지역의 MD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음.
-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음.
-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동아시아에서 MD 관련 군사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통합 MD 체제 구축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MD 구축의 이유로 북핵 위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한국 등의 MD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미국 "중국, 김정은 특사 방중 사전통보">(5/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한 데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음.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특사 파견)를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음.
- 벤트렐 부대변인은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논평을 피하면서 "이번 북한의 특사 파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국 정부 측에 문의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음.



-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외교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같은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벤트렐 부대변인은 또 북한·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 참가국이 단합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두 핵심목표인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5개 참가국은 북한과 관련해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북한과의 비공식 외교 경로를 의미하는 이른바 '뉴욕채널'의 가동 여부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접촉채널을 갖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밖에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달 초 주한 미국대사관에 협박 편지가 배달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미국 일리노이 하원 "위안부 범죄역사 공교육화 모색">(5/24, 연합뉴스)

- 미국 일리노이주 하원이 24일(현지시간)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위안부들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특히, 결의안은 '위안부 범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미국 공교육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일리노이주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 이날 결의안은 반대의견없이 사실상 만장일치인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 결의안은 "일리노이주 하원은 강제동원위안부들이 일본의 위안소에서 강제로 수용되고, 위안부로 일하도록 강제당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제동원 위안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적었다.
- 또 "아시아 역사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가르칠 때 적절한 나이의 학생들에게 위안부 및 인신매매에 관해 교육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 특히 "주 하원은 위안부 및 2차 세계대전 중 운영된 미주 일본인 강제수용소 등을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 정규 과정에 포함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일리노이주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번 결의안은 미국 내 한인단체인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뉴욕



- 과 뉴저지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가 2012년부터 일리노이주 하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임.
- 특히, 두 단체는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미국내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설득해 결의안 추진에 대한 찬성 의사를 이끌어냈음.
 -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미국내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첫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했음.
 - 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채택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과 지난 1월 뉴욕주 상원, 3월 뉴저지주 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임.
 -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음.
 - 한편, 연방 하원은 최근에는 결의안 채택 이후 6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결의안을 강화한 '제2의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 중임.

바. 미·러 관계

- <푸틴, 오바마 친서에 답신...국가안보회의 서기 방미>(5/22,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간 협력 강화 제안을 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한 달여 만에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인테르팍스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대통령 외교 문제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하루 전 미국 방문 길에 오른 국가안보회의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세프에게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친서를 맡겼다고 전했다.
 - 우샤코프 보좌관은 파트루세프 서기가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방러한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유럽 MD와 핵 감축 문제, 양국 간 통상경제 협력 강화 등과 관련된 제안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 MD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MD 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적 강제성을 지닌 협정



- 을 체결하지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 미·러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나토와 함께 추진 중인 유럽 MD 계획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음. 미국이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러시아가 자국 핵전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임.
 -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양측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음.
 - 이 와중에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인권 훼손을 문제삼는 인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저촉되는 인사들에 대해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아왔음.
 -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는 그러나 지난달 중순 도널드 럼즈펠트, 이달 초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의 잇따른 러시아 방문과 함께 양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오바마와 푸틴 대통령의 친서 외교는 이 같은 양국 화해 분위기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오바마, 對러 협력관계 강화 의지 거듭 피력”>(5/2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거듭 확신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 전 방미 중인 니콜라이 파르투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혔음.
 - 헤이든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파르투세프 서기와 톰 도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사이의 회담에 잠깐 동안 동참해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 협력 등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의사를 피력했다고 소개했음.
 - 미-러 양측은 또 이 자리에서 양국의 대(對)테러 공조 심화 중요성과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헤이든 대변인은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북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푸틴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주 토네이도 피해에 대해 위로 전문을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시
 - 한편, 파르투세프 서기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전달했다고 주미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음.
 - 이는 지난달 중순 오바마 대통령이 도널런 보좌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대한 답신 형식임.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음.



- <러시아 "미국의 유럽 MD 무력화 방안 마련했다">(5/23, 연합뉴스)
 -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유럽안보회의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 핵전력에 대한 미국 MD의 부정적 영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기술적 방안이 개발됐다"며 "이 방안의 실현 문제는 미국 MD 전력 평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미 MD 무력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전문가들은 그러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발언이 미국의 MD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한편,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 실장은 이날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방적 유럽 MD 구축 계획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음.
 - 이바노프 실장은 유럽 MD는 러시아와 미국 및 나토 관계의 가장 논쟁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파트너들의 계획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그는 유럽 MD 문제에서 다른 나라의 우려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보의 논리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안보 균형과 상호 신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이바노프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어떤 우월적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의 유럽 MD가 러시아 핵전력을 침해하지 않고 그것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기인하는 공격을 막는데만 이용될 것이란 강력한 보장을 원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 미·러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나토와 함께 추진 중인 유럽 MD 계획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음.
 - 미국이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러시아가 자국 핵전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임.
 -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양측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사. 중·일 관계

- <"일본 군함, 센카쿠서 중국 어선 조업 방해">(5/14, 연합뉴스)
 - 일본 군함이 최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방해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4일 보도했음.



- 일본 해상 자위대 선박은 일본 주둔 미국 해군 함정과 함께 센카쿠 해역을 순시하다가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았음.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다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이고 다오위다오 주변 해역은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이자 중국 어민들이 대대로 조업을 해오던 곳"이라며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음.
- 센카쿠 부근 해역은 어업 자원이 풍부해 많은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해왔고 최근에는 중국 어선들이 빈번하게 조업에 나서면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미군 함정이 이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자위대 선박은 또 일본 선박의 조업 활동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이 과정에서 미야자키(宮崎)현 소속 참치잡이 어선의 저인망 그물 밧줄이 절단되기도 했음.
- 일본 미야자키현 어업연합회는 "이번 일은 국방 분야의 문제이지만 일본 해상 자위대와 배상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한편, 중국 해양 감시선 66, 46, 26호는 편대를 이뤄 23일 센카쿠 해역 12해리에 진입해 감시 활동을 했다고 중국 국가해양국이 밝혔음.

아. 일·러 관계

- <러 외무부, 하시모토 위안부 망언 강력 비난>(5/24, 연합뉴스)
 -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를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치권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국수주의적 수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음.
 - 외무부는 "특히 여러 일본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위안부 이용 관행과 그들의 성 노예화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다"고 꼬집었음.
 - 그러면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오사카 시장)의 발언은 특히 파렴치했다"면서 그는 전쟁 기간 중의 위안부 관행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병사들이 전투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고 비난했음.
 - 외무부는 이어 이러한 발언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보편적 평가와 차이가 나는 경향성 있는 평가들을 일본 사회에 주입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지속적인 시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고 지적했음.
 - 외무부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진 일본 내의 건강한 세력들이 한국과 중국 국민은 물론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운 모든 이들에게 모욕적인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합당한 평가를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 기. 타

● <아베 "야스쿠니신사·알링턴국립묘지, 뭐가 다른가">(5/2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국민으로서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야스쿠니 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빗대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질문에 "미국 국민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소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 그는 "미국 대통령도 그 곳(알링턴 묘지)에 가고, 나도 일본 총리 자격으로 방문했다"면서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군 장병이 안장됐다고 해서 알링턴 묘지에 가는 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조지타운대학의 케빈 독 교수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본 지도자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 특히,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안장된 이후 중국과 한국은 몇 년간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 아베 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침략 해석'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음.
- 그는 "나는 한 번도 일본이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침략에 대해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
- 아베 총리는 또 "나는 자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으며, 의회에서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면서 "주류 언론매체가 발언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잘못 인용해 왔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지난 2006~2007년 첫번째 총리직 임기와 현재 재임 기간에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거의 언론의 머릿기사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음.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위협 등을 언급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음.
- 이밖에 아베 총리는 첫번째 총리 재임기간에 대해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자신했음.

● <日, 고문방지위서 위안부문제 기존 입장 되풀이>(5/23, 연합뉴스)

- 유엔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 강도높은 대책을 요



- 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이틀간에 걸쳐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위안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음.
-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대표는 일본이 지난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위안부 문제는 70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
- 일본 측은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이를 그대로 되풀이했던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고 주장
-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평화조약 등을 통해 법적 보상 문제를 처리했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AWF)을 설치해 위안부 여성에게 의료와 복지지원 및 사죄금을 제공했다면서 2007년 이 기금이 해체됐지만, 후속조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상투적 답변으로 일관
- 일본 측은 특히 21일 회의에서 위안부가 20만 명이나 된다는 일부 위원의 질의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음. 하지만 이날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은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동조하지 않는 모습
- 지난 2007년 심사에서도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위안부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 바 있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4주 뒤인 5월말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
- 한편, 이에 앞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국민에 교육하길 바란다"고 권고
- 이 견해는 위원회가 4월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제50차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확정된 것임.

●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법 놓고 한미일 이견차 분명>(5/23, 월스트리트저널)

- 한미 양국이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관방참여(총리지문역)의 방북이 한미일 3각 대북공조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납북자 문제와 관련, 외교적 독자노선을 펼칠 계획이라고 함.
- 이지마 참여는 지난주에 평양을 깜짝 방문해 동맹국들의 빈축. 한미 양국은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력을 넣는 한미일 공조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음.
- 후루야 게이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북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본이 앞장서되 동맹국간 공조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후루야 위원장은 21일 인터뷰에서 "한미



- 양국은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납치된 사람들이 일본인 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에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지마 참여의 방북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미리 통보 받지 못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지마 참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일 3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 데이비스 대표는 "미국은 한미일 3국을 분열시키고 국가별 입장 차이로 인한 이견을 악용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이 아닌) 대화로 전략을 선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후루야 위원장은 동맹국들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후루야 위원장은 한국이 이지마 참여의 방북 사실을 비판한 반응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끔 한국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 얻을 게 있을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올해 2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한 데다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전쟁 위협 도발을 반복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높았음. 북한은 지난 주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한 이후 20일에도 두 발을 추가 발사
 - 이지마 참여는 아베 내각 관료들 가운데 처음으로 방북한 인사임. 북일 회담은 지난해 8월 4년만에 재개됐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음. 아베 총리는 납북 문제를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납치 문제 등 현안 해결에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음.
 -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주변 6개국에 참여하는 6자회담의 일원. 이지마 참여의 방북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음. 후루야 위원장은 이지마 참여가 북한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양해나 양보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지마 참여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했음.
 - 한편,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외국인들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됨. 북한은 일본 국적자 13명을 납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그 가운데 5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음. 북한은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납북자는 17명이나, 수백 명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됨.